북핵 6자회담 폐막

核불능화·대북 지원 10월까지 완료

검증 방안·시기 등 현안 합의는 실패

9개월여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 마무리 시한을 설정하고 검증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과 검증 착수 시점 등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12일 사흘간 진행된 수석대표회의와 실무회의를 결산하면서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안인 검증체제 마련과 관련,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틀내에서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되는 감시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월11일) 이전 검증에 착수하는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 참여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이 일본의 지원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날 회담을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언론발표문은 서문과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발표문은 북한의 불능화와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지원 잔여분 지원을 병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양측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규정했다.

검증체제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이 결정하기로 했다.

감시체제의 임무에 대해서는 '비확산 및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감시자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북 중유 지원과 관련,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가능한 조속히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의 지원 참여가 유보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에너지 공급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위해 노력하며 한국과 중국은 비(非)중유 잔여분 지원을 8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또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발효(8월11일)되기 전에 북한 핵 신고내용의 검증에 착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anticipating)"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검증 착수전 테러지원국 해제는 불가"

북-미 8월 11일전 합의 도출할까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체제에 대한 원칙이 합의됐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현실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 11일 내에 과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 6자회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6자는 우선 검증체제를 비핵화 실무그룹 산하에 설치하고 여기에 6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데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검증 방법은 과거 리비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실제 실행됐던 모델을 토대로 하되 북한의 거부감이나 북핵 사태의 특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조율해야 할 사안이 수두룩하다.

우선 검증대상이 가장 큰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대상에 있어서 최대 쟁점은 과거 1990년대 1차 핵위기 당시 북한과 IAEA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던 액체폐기물저장소가 실제로 포함되느냐 여부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신고서에는 1차 핵위기 때 IAEA에 제출한 16개 시설보다 많은 20여개의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목록에는 '폐기물저장소'라는 표현이 담겨있지만 이를 두고 미국은 과거 핵 활동의 전모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려면 플루토늄 총 추출량 등 과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액체폐기물저장소까지 포함시켜려 하는 반면, 북한은 '폐기물 저장소'로 인정되는 시설로 하자는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원자력 시설을 가동하면서 전문인력들이 사용한 장갑과 의류 등을 폐기한 저준위폐기물저장소 등이 '폐기물저장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명분·실리 챙긴 北 최대 수혜

6자회담 각국 득실…南 '왕따'는 모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은 사흘간의 수석대표회의 기간 치열한 논리싸움 끝에 6개항의 언론발표문을 만들어냈지만 입장에 따라 득실이 엇갈린다.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북한.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유 100만t 분량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불능화 조치도 종료되기 어렵고 다음 단계 논의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10월말까지 '10·3 합의' 이행을 마치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검증에 대해서도 북미 양자접촉의 과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의 원칙 만 담고 시기나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편의 의무 이행 없이 나만 무장해제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완료되는 8월11일 이전까지 검증계획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며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나마 그동안 북한이 검증참여에 부정적이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명시했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핵확산 문제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고 이 체제의 구성원칙을 확인한 것이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 하다.

한국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번 회담의 공식일정에 앞서 북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 속에서 6자회담에서도 '왕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연합뉴스

일본이 14일 자국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할 지 여부를 공표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한 독도경비대원이 12일 오후 동해로 향한 대표 옆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포신 주변 진입로 레일에 앉은 새는 독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괭이갈매기. /연합뉴스

"독도는 한국 영토…분쟁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 정상회담 日측 통보설 전면 부인

청와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가진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후쿠다 총리가 그런 방침을 통보하지 않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독도 명기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본측의 내일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도야코 회동때 이 대통령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전남 일부 기초의회 '후반기 감투싸움' 파행 장기화

민주 싹쓸이 강행 반발…계파 갈등도

나주와 신안 등 전남도내 일부 기초의회가 보름이 넘도록 의장단 등 원구성을 못하는 등 의정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13일 현재 광주·전남 27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주 5곳, 전남 20곳 등 25곳이 의장단 구성 등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나주시와 신안군의회는 민주당측의 싹쓸이 강행에다 계파간 갈등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5~6차례에 걸쳐 의장단 구성에 나섰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제안을 무소속 의원들이 거부해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 등 5석 가운데 무소속 측에 경제건설위원장 1석을 제시했으나 무소속 측이 부의장직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 1명이 민주당에 입당하자 무소속 측은 '의원 빼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안군의회도 지난 3일 의장단을 선출하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으로 특정 후보가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 남구의회와 북구, 화순, 고흥 등 상당수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과 나눠먹기, 담합 등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 군의회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낙점설까지 불거지는 등 국회의원이 의장단 구성까지 깊숙이 개입, 의원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중앙정치 구태가 되풀이 되는 등 기초의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기초단체장과 함께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배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나주=정칠현기자 chjung@